Global Focus

프랑스 공연관련 임시직 파업과 새로운 노동운동 방향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는 그들의 문화적 성향, 자산, 그리고 능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한다. 전 세계에 휘몰아치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글로벌리제이션 폭풍에도 불구하고 굿굿하게 사회통합을 우선으로 하는 전통적인 프랑스 사회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애정 덕분일지도 모른다. 프랑스가 이렇게 문화에 대해 남다른 집착을 보이는 것은 자본의 이익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배원리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 사회에서 문화의 영역만이 사회의 다양성을 지켜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믿기 때문이다.

2003년 여름, 이러한 프랑스 문화계가 시련을 맞고 있다. 연극, 영화, 방송 등 공연(spectacle)과 관련되어 있는 임시직(intermittent) 노동자들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실업보험체계의 변화에 대해 반대하여 파업 및 시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2개월로 되어 있는 실업보험 수혜를 위한 피보험 고용기간 산정시 기준기간을 10개월로 줄이는 등의 '개혁방안'에 대한 사용자단체와 일부 전국단위 노조의 협약체결로 촉발된 이번 파업은 올해 말까지 현재의 보험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2년에 걸쳐 기준기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의 완화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파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이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그 결과 매년 전세계에서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온다는 아비뇽 축제를 비롯, 많은 공연과 축제가 취소되었다.

프랑스의 실업보험은 국가의 개입 없이 노사의 기여금과 노사동수의 자체관리를 통해 운영되는데,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실업보험체계 이외에 재정적으로 분리된 여러 특수직종을 위한 개별적 특수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공연관련 종사자들은 이러한 특수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며 직업의 특성상 임시직 형태의 취업이 많아 임시직에 대한 특별한 보험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관련 특별 실업보험체계가 오랜 기간 동안 적자상태에 처해 있었고 적자규모가 8억 4천만 유로에 이르게 되자 수혜자수 감소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이미 단순히 공연분야의 임시직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프랑스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공연분야 파업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한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임시직 노동자들이 기존 거대노조의 통제를 넘는 자율적 조직체를 구성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자율적 조직의 특성은 기존 노조들보다 더 결연하며 과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문제를 단순히 실업보험의 차원을 넘어 세계화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프랑스 현 정부의 문제 인식에 대한 반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도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신문 'le Monde'(2003년 7월8일자)는 자율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임시직 노동자들이 주로 25-40세이며 고용의 불안정성이 다른 이들에 비해 특히 높으며 주로 지금까지는 정치적 운동의 경험이 없는 집단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쩌면 노조조직률이 9% 정도에 불과한 프랑스에서 이러한 자율적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 중에는 이미 노조활동을 하던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새로운 자율조직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의사전달 경로를 통해 기존 노조의 기술적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자.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문제에서는 우선 양적인 면에서 현재 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될 만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비정규직 정의와 규모에 대한 차이에 따라 비율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느 쪽의 수치를 들더라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의 수치라고 판단된다) 동 비율이 확산추세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비정규직의 노조조직화가 일반화되지 못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기초적 제도가 미비하며 교육훈련 등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준비에서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임금, 부가급여 등 보상에 있어서도 정규직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비정규직 문제가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문제로서 부각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2000년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문제, 대기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사내 하청 문제 등에서 보여지듯이 기존의 우리나라 노조가 비정규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릴 듯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거대노조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노동자 조직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인터넷을 주요 소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청년층의 실업문제와 비정규직화가 계속 확산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급속히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기존의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정부의 역할도 크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 비용 감소만을 위해 비정규직 활용을 확대하려는 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노조, 비정규직 문제를 노사만의 문제로 간주하려는 정부, 만일 기존의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율적 노동자 조직의 출현은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다.